

난방비 민심에 화들짝...대통령실 “취약층 지원 2배 확대”

부처 대책 발표 앞서 긴급 브리핑
에너지바우처·가스비 할인 2배 늘려
국립 신속한 집행 정부에 주문
전·현 정부 난방비 폭탄 책임 공방

폭발적으로 늘어난 난방비 부담으로 국민의 불만이 커지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야당도 7조 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가구에 대한 가스비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린다.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의 대책 발표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직접 대책을 설명한 데에는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수석은 가스요금 급등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제적 현상으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서 국가별 가스요금(세금 포함 최종 소비자가격 기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의힘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정부에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서 "당장 추경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비비나 이-전용이 가능한 재원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30만 원 정도로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일중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화해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검토 중으로, 정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국회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기존에 제안한 5조 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조금 바꿔서, 약 7조2000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지원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를 평가절하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많아 117만 가구에 불과해, 고물가고 에너지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돌렸다.

최상목 수석은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 배경과 관련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전인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지와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며 무책임과 뻔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현 정부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北 무인기 보고’ 국회 국방위 30분만에 정회

여야 안보실장 등 출석 두고 공방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에 침범한 만큼, 김용현 경호처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회 출석은 국방위가 아닌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야당이 국가 안보를 놓고 지나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가 약 30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고성까지 오가자, 회의는 현안 질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15분 가량 정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 개의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라며 "이런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비행금지 구역에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곳 경호처 장관의 부대로 들었다"며 "(대통령실)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에 대해 경호처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현 의원은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

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도 한 달이 지난 오늘에야 국방위가 열린 것은 뒷북을 쳐도 보통 천 게 아니다"라며 "국방위에서 경호처와 안보실이 나와 경위를 설명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어떻게 모든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냐.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얼마나 사건이 많았나"라며 "저는 지금과 같이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성일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야당이) 공격을 해도 너무 지나친 공격을 하고 도를 넘었다"고 거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출석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 국방위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운영위 소속 인원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여권에서 '북한 내통살'을 언급한 것을 두고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성토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이재명, 7조5000억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제안

“전체 80% 국민에게 지원금 집행”

“에너지 기업 ‘횡재세’ 검토해야”

에너지바우처 예산 2배 증액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약 7조5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7.5조원의 지원금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

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 가구에 100만원, 30~60% 가구에 60만원, 60~80% 가구에 40만원을 지급하면 전체 80% 국민에게 7조2천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다"며 "기초수급대상자 긴급한 지원은 별도로 하더라도, 서민·중산층에도 에너지 상황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횡재세에 대해서도 "작년 고유가에 정유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물분담이 없는데,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쓰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 이를 강제할 방안까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해서는 "올해 85만 가구로 대상을 줄였는데, 코로나 이전인 117만 가구로 회복하고 특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두 배로 늘려야 한다"며 "대략 1천778억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책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 형 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재활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학과(M.S.W.)	○○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
		한국어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 형 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